보도자료	사법정책연구원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4. 11. 22.(금)	담당부서	연구기획실
	담당자	고대석 공보판사 (☏ 031-920-3548)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2024년도 운영위원회」 개최

▣ 사법정책연구원은 2024년 11월 21일 사법정책연구원 청사 내에서 2024년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함

-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法定기구(법원조직법 제76조의6)로, 임기 2년의 위원 9인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 이상 소집함

- 現 운영위원장은 이기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前 대법관)이고, 운영위원은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위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관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이형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구성됨

▣ 2024년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업무현황 등을 보고하고, 운영위원들의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사법정책연구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운영위원들은 내년인 2025년의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접수된 연구과제 제안서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사법정책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법부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체적인 선정에 있어 개별 연구과제의 긴급성, 시의성과 종전 과제와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우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하여야 함

- 의료조력사, 선거소송,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위자료 산정 등 이미 제안된 개별 연구주제의 연구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짐. 나아가 연구주제제안서에 구속되지 않고 연구범위를 넓히거나 조정함으로써 더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됨

- 이미 제안된 연구주제에 더하여 각 운영위원별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이종범죄 간의 균형을 고려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AI 등 신기술로 인한 법적 피해와 구제방안, 법관의 대규모 사직을 막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서도 유익한 제안이 이루어짐

- 사법정책연구원의 자체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거쳐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효율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다른 기관과의 적극적인 자료 공유와 협력이 필요함

▣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사법정책연구원의 향후 운영 및 2025년도 기본연구과제 선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법원 내·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